

보이스피싱, 단순 조력자도 자비 없이 '실형'

총책은 징역 10년 이상, 중간관리자 5년 이상 단순가담자, 3년 이상 실형...범죄단체로 의율

검찰이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을 위해 적극적으로 중형을 구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범원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이들에게 과거보다 강화된 형량을 선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검찰청은 6일 조직화·전문화·지능화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대표적인 민생 침해 악질 범죄로서 말단 현금수취자라 할지라도 대부분 징역형을 선고받고 있으며 그 형량도 점점 높아지는 추세라고 밝혔다.

대검은 지난해 8월19일 보이스피싱 사건처리기준을 시행했다. 보이스피싱 총책 등 주범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적용해 최대 무기징역을 구형하는 등 강화된 사건처리를 지시했다.

검찰은 단순가담자도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이스피싱 가담자들에게 범죄단체 구성·가입·활동 등을 적극 적용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직접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지 않은 대포폰·대포통장 유통사범, 범죄수익 환전사범 등에게도 징역형을 구형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도 출범시켰다. 합수단에는 검찰, 경찰,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방송통신위원회 등 범정부 전문인력 55명이 참여하고 있다.

대검에 따르면 범원도 보이스피싱 사범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추세다. 범원은 보이스피싱이 조직적·계획적 사기범행으로 그 폐해가 심각하고 범행수법이 지능적으로 진화해 일반 국민

들이 대처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지법은 지난해 2월 2015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1년간 58억원을 받아 쟁긴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고, 이 판결이 확정됐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2017년 8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보이스피싱을 통해 약 23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총책에게도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이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54억원을 받아 쟁긴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은 징역 20년을 선고 받기도 했다. 이 총책에게는 범죄단체 및 특경법 사기 혐의가 적용됐다.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하는 조직원과 총책을 연결하는 중간관리자도 징역 5년 이상을 선고받고 있다. 피해자 229명에게서 약 46억원을 받아 쟁긴 조직의 중간관리자는 징역 8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214명에게 16억원을 편취한 조직의

중간관리자는 징역 7년(확정), 267명에게서 13억원을 받아 쟁긴 조직의 중간관리자는 징역 6년을 선고(항소심 진행 중)받았다.

단순가담자도 실형을 선고 받고 있다. 외국에서 걸려오는 전화를 우리나라에서 걸려오는 전화인 것처럼 번호를 조작하는 기계를 관리한 태국인과 4억원을 피해자에게 걷은 수거책은 각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대포통장이나 대포폰을 유통한 사범들도 징역 1~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일부 판결은 확정되기도 했다. 보이스피싱 범죄자금 약 2억원을 환전해준 환전책이 징역 4년을 선고 받기도 했다.

대검은 "보이스피싱으로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긴 피해자들이나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서는 이와 같은 범원의 선고형량도 죄에 상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보이스피싱 사범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 방안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선욱기자



고흥경찰, '주민과 함께하는 치안공동체 간담회' 개최

고흥경찰서(서장 강승명)는 2일 풍양파출소에서 최영열 생활안전과장, 정일주 생활안전계장, 풍양면 마을이장 등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체치안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고흥=기동취재본부



나주경찰, 음주운전 특별단속 TF팀 구성 및 집중단속

나주경찰서(서장 박상훈)는 음주운전 특별단속 TF팀을 구성하여 혁신도시 내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나주=송준표기자



강진소방, 전동킥보드 안전교육 실시

강진소방서(서장 최기정)는 12월과 1월 두달간 강진군 관내 초·중·고 대상으로 "전동킥보드 안전하게 타기"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강진=김영일기자



여수소방서 119구조대, 아찔한 교통사고 현장 출동

여수소방서(서장 이달승) 119구조대는 지난 2일 여천 롯데마트 앞 도로에서 SUV차량이 버스정류장을 들이받고 전복되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고 밝혔다. 여수=김현근기자



광주 남부소방, 겨울철 화재취약대상인 물류창고 현장지도 방문

광주 남부소방서(서장 이남수)는 겨울철 화재 예방을 위해 화재취약대상 방문해 현장지도 및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최이슬기자



광주전남방무청, 전라남도교육청 찾아 현안 공유

광주전남지방방무청(청장 김용우)은 2일 전라남도교육청을 방문해 김대중 교육감과 방무행청 현안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서선욱기자

“아들 뇌전증” 목격자 자처...병역면탈자 모친 4명 공범 기소

브로커 김씨 등 22명 기소...면탈자 15명, 공범 6명 재판행

서울남부지검·병무청 합동 수사팀이 허위 뇌전증 병역면탈 사건을 수사하는 가운데, 다수의 어머니들이 아들의 병역 면탈에 개입해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법무부가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병역 브로커 김모(38)씨 등 22명의 공소장에 따르면, 김씨와 병역 면탈자 15명 외에 총 6명이 공범으로 기소됐다.

병역법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공범 중 4명은 병역면탈자들의 어머니로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브로커 김씨와 공모한 어머니 A

씨는 지난해 5월13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아들의 사무실에서 “애가 쓰러졌는데 의식이 없다. 입에 거품이 있고 목이 굳어 있다”고 119에 신고했다.

아들은 병원에서 20살 때부터 연간 3~4회 정도 발작이 있었다는 취지로 증상을 설명했고, 급급차를 타고 함께 병원에 간 A씨가 목격자 노릇을 했다.

이후 아들은 ‘난치성 뇌전증’을 동반하지 않은 상세불명의 뇌전증이라는 병명의 병무용진단서를 받아 같은 달 18일 재신체 검사대상인 7급 판정을 받았다.

어머니 B씨도 지난해 10월 김씨의 지시를 받아 지난해 10월23일 새벽 서울 동작구의 한 병원 응급실을 찾아 아들이 과거부터 가벼운 발작 증상이 있었다며 “자정에 컴퓨터를 하던 아들이 의식을 잃었고, 3분 정도 경련이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C씨 역시 지난 2020년 11월 집에서 “아이가 자고 있는 모습이 이상해서 자세히 보았더니 정신을 잃고 몸을 떨고 있다. 팔 다리가 뻣뻣하다”며 119에 신고해 아들을 병원으로 옮겨 뇌전증 진단서를 받도록 도왔다.

어머니 D씨 지난 2021년 3월 김

씨와 공모해 ‘뇌전증 시나리오’를 전달받아 아들에게 건넸다.

또한 검찰은 김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 중인 병역 브로커 구모(47)씨를 2020년 2월께 알게된 뒤 뇌전증을 가장해 의뢰인들의 병역 면탈을 돕는 범행을 가담하면서 병역 면탈 수법을 익혔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김씨는 ‘뇌전증 병역면탈’을 돕는 수법으로 의뢰인들로부터 총 2억 6610만원을 받아 재판다.

김씨에 대한 첫 재판은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조상민 판사 심리로 다음달 10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최이슬기자



중국, 자국민 해외 단체 여행 부분 허용

중국 정부가 한국으로의 해외 단체 여행을 여전히 불허하고 있는 6일 오전 외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중국 정부는 6일부터 자국민의 해외 단체 여행을 한국과 일본, 미국을 제외한 20개 국가에 대해 부분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신안 전북 정보호 실종자 가족 선체 인양 동의

실종 가족, 6일 오후 1시 사고 지점 방문

신안 해상에서 전북된 정보호의 실종자 가족들이 선체 인양에 동의했다. 정보호 실종 선장 가족 A씨는 가족 대기소가 마련된 전남 목포 산정동 한 건물에서 “선체를 인양해 수색한다는 계획에 가족 모두 동의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이날 해경이 가족에게 수색상황을 브리핑하는 장소에 실종자 네 가족이 모였다”며 “연락이 안 닿은 한 가족을 제외하고 네 가족 모두 동의했

다”고 설명했다. A씨는 “실종자가 발견되지 않을 경우 수색이 일주일에서 열흘까지 진행된다고 들었다”며 “수색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진행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실종자 가족은 선체 내부에서 실종된 선원이 발견됐기 때문에 배를 인양해 내부를 전체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는 설명을 해경으로부터 들었다.

인양 작업 시 선체 안팎에 위치한 실종자들이 바다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육 유실 방지막을 설치한다는 내용도 전달받았다.

‘정보호가 기울었다’ 등 이상징후에 대해서 A씨는 “배에 탄 가족으로부터 들은 적은 없다”고 말했다.

가족들은 이날 오후 해경이 제공하는 배를 타고 오후 1시 사고 해역을 찾아 수색 상황을 지켜본다.

지난 4일 오후 11시 17분께 입자면 대비지도 서쪽 16.6km 해상에서 선원 12명을 태운 24급 통발어선 정보호가 전복됐다. 신안=이덕주기자

허위계약서로 청년 전세대출 3억원 ‘꿀꺽’ 총책 등 17명 검거

인터넷에서 가짜 임대인·임차인을 모아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청년 전세자금대출 3억원을 편취한 조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사기 및 감금 혐의로 30대 총책 A씨 등 17명을 검거하고 이 중 8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2~3월 은행 등 금융기관에 허위로 작성한 전세계약서를 제출해 청년 전세자금대출 3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총책·모집책·감시책 등 역할을 나눠 범행했으며, SNS나 온라인 카페에 ‘대출이 필요한 사람 모집’ 등의 게시물을 올려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 등 10명을 모집했다.

이렇게 모인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은 3차례에 걸쳐 최대 1억원의 ‘무주택 청년전세대출’을 신청, 대출금 3억원을 수령해 역할 분담에 따라 이를 나눠가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중에는 조직폭력배도 1명 포함돼 있었으며, 가짜 임차인이 대출금을 받아 도망가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를 빼앗아 차량 및 숙박업소에 감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무주택 청년전세대출’의 경우 온라인 서류 심사만 통과하면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서민 주거생활 안정과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재환기자